

중 · 장기적인 낙농정책 제시해야



조 용 환
조선신문 편집이사

한국 낙농산업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유소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재고분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업계·학계의 시각이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당국 역시 이렇다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국 낙농산업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유소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재고분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업계·학계의 시각이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당국 역시 이렇다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재고분유는 지난 9월말 현재 전지 3천9백49톤·탈지 1만4천2백31톤 등 모두 1만8천1백80톤. 이 물량은 수평적 개념으로 살펴볼 때 올 최고 재고분유를 기록했던 7월말 1만9천3백15톤에 비해 1천1백35톤이 감소했으나 열흘 전보다는 6톤이 증가했다.

입체적으로 보면 9월 상순부터 우유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재고분유의 공매처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재고분유는 오히려 증가한데 있다.

그 원인은 올 상반기중 원유생산량은 1백31만3천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1백16만8천톤) 대비 12.5% 증가한 반면 원유소비량은 3백7만2천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3백4만5천톤) 대비 0.9%로 낮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백색시유 소비량은 올 상반기중 6백8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7백36톤)보다 7.1% 감소, 국산우유소비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올 들어 심각하게 대두된 원유수급 해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를 시행중이다. 지난달 9일 열린 낙농진흥회 긴급이사회에서 이 제도 시행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9표·반대 2표·기권 3표·무효 1표로 가결되어 이같이 결정, 추진중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낙농가로부터 집유한 원유를 수요자인 유가공업체에 공급하고 남은 원유에 대해서는 정상원유대의 70% 수준만 지급키로 했다. 이 제도의 개념이나 농가별 기준 원유량 설정과 가격 등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보고 생략

키로 한다.

농림부와 낙농진흥회 관계자들은 작금의 산적한 낙농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이 제도를 통해 풀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를 대표한 이사들의 집단 사퇴서 제출 등 강한 반발 속에 추진되는 제도 이어서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민주적으로 표결처리 되어 이뤄졌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낙농전문가들 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낙농제도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낙농가와 합의점을 찾는

후 추진되어야지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제도는 소모적일 공산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농림부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재고분유 공매처분을 위해 올해만도 9백억원을 투입, 당초 4백20억원보다 배를 집행했다. 그 재원 확보에 관계자들의 고충은 남달랐을 것이다.

또한 친 환경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와 담리작을 통한 사료작물 생산으로 원유생산비를 낮추려하는 등 낙농대책 마련에 관계자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적 정책에 앞서 낙농가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장기적인 낙농정책을 조속히 마련, 제시해야만 한다. 사실 농림부는 근년 들어 낙농분야에 대해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대책만 냈을 뿐 중·장기적인 정책은 없었다.

낙농가 역시 과잉원유 해소를 위해 젓소도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원유생산쿼터제에 대비, 오히려 그 두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유업체도 유제품과 유사 유제품 수입에 급급하여 국내 재고분유는 우유소비 성수기에 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로 낙농 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고분유 적체의 또 다른 원인은 경영악화로 많은 우유조합과 중앙회에서 운영했던 목우촌까지 문을 닫은데 기인된다. 만약 유업체가 올해 이렇게 원유가 많이 잉여될 것으로 일찍이 분석했다면 올 상반기중 1만2천7백톤이라는 혼합분유는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업체는 잉여원유로 인해 연간 1천억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했다. 따라서 일부업체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유사유제품 수입에 나섰고 국산우유 소비홍보에는 미진한 느낌이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내용은 물론 한국낙농우유협회·농협중앙회·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7월~10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실적을 살펴보아도 유업체의 참여율은 10%미만에 불과하다.

유업체가 올해 수입한 혼합분



유 등은 지난해 발주한 물량이며, 유가공협회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분유수입을 양기로 결의하여 내년에 수입량이 없을 것으로 보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낙농가는 증식위주였던 젖소사육두수를 앞으로는 보다 높은 능력·체형위주로 전환하고, 원유생산비도 절감하여 목장경영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 유가공업체 역시 낙농가와와는 실과 바늘 관계이며 수레의 한 바퀴인 점을 중시, 앞으로 국산우유소비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옳다. 국산우유소비홍보는 이제 시유시장만을 지키고 있는 한국 낙농산업을 그나마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속담에 “바빨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단기적·단편적인 제도 추진에 앞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각자 맡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 장·단기적으로 펼쳐 나갈 낙농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의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그 욕구충족을 위해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겠으니 생산자와 업체는 어떻게 하라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은 낙농문제를 진흥회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소비를 창출해야 한다. 우선 초등학교에 국한된 학교우유급식제도를 중·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학부모에게는 물질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유소비를 약 5백톤정도 추가 소비되도록 했으면 한다.

현재 국산우유를 취급하는 유업체들은 국산우유의 이익성이 낮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고 이익이 많은 수입유제품을 원료로한 제품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중시, KS마크제도 처럼 국산원유 또는 그를 원료로한 유

제품에 대해 신선원유마크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구하는 것도 국산우유 소비폭을 높이는 길이다.

어쨌든 한국 낙농산업이 앞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든 정책이든 정부·낙농가·유업체·소비자 모두가 합의된 중론을 토대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법은 또 다른 악법을 낳을 여지를 잉태하는 것으로 악법이라면 현대사회에 알맞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정되고 보완하여 도입함이 옳다. (㉞)

(필자연락처 : 017-780-0011)

